

시민군 최후 항전지 원형 되살려 5·18유적 보존

리뷰 2017

⑤문화전당 옛 도청 복원 결정

민원실·경찰청·상무관 포함

도청 별관~본관 연결 통로도

文대통령 37주년 기념사 전기

대책위 농성 1년만에 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은 개관 2년째인 올해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문화전당에 포함된 옛 전남도청본관(민주평화교류원·민평) 등 5·18 관련 유적의 복원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대책위)가 현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인지 1년여 만에 복원방향을 확정했다.

예초 옛 전남도청은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6개 건물에 포함된 5·18 유적이다. 시민군들이 계엄군에 맞서 최후의 저항을 했던 5·18의 대표적인 공간이다. 나머지 옛 전남도청 민원실·별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상무관도 5월 관련 건물이다. 문화전당측은 민평의 공간들에 5월을 형상화한 '열매들의 나비떼' 전시 콘텐츠를 구축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광주항쟁 당시 상황실, 방송실 복원과 건물 외벽 총탄자국 등이 훼손됐다면 원형복원 등을 요구, 2016년 9월부터 현장에서 전파농성에 돌입했다.

도청복원 현안이 전기를 마련한 것은 지

난 5월 5·18 37주년 행사 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5·18 37주년 기념사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은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지난 6월14일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범시도민 대책위가 발표한 옛 전남도청의 '1980년 5월 모습으로 원형복원'에 동의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청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제시됐다. 복원사업은 내년 1월께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 완공된다.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협의회)는 옛 전남도청을 오는 2021년까지 복원하기로 뜻을 모으고 복원 청사진이 될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추진한다.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 설계안과 5·18 당시 상황을 재연할 전시 콘텐츠 설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 예산으로는 모두 6억원이 투입된다.

복원 범위에는 현재 민평에 포함된 6개 건물이 모두 포함됐다. 옛 전남도청 본관·민원실·별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이다. 협의회의 복원안은 6개 건물의 내·외부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의 활동 장소였던 점을 고려해 이미 철거된 건물 간 연결통로도 다시 만들어진다. 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수년간 논란 끝에 철거했던 옛 전남도청 별관과 본관을 연결하는 30여m 통로도 포함됐다.

이미 문화전당 축에서 설치·가설한 상당수 시설이 철거된다. 옛 전남도청과 본관 사이에 설치된 문화전당 방문자센터,

옛 전남경찰청 본관 외벽에 설치된 LED 펜스 등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첫 사업으로는 24억원을 들여 상무관 접근성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상무관은 5월 희생자들이 임시 안치됐던 공간이지만 급남로 지하상가 출입구와 맞닿아 있어 출입에 장애가 됐다. 사업은 내년 1월께 발주돼 오는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협의회는 상무관 접근성 개선사업, '오월의 문' 조성 등은 가급적 오는 2020년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옛 전남도청 복원과 맞물려 민평의 운영 방향 재정립은 향후 과제다. 문화전당과 민평을 때어내 운영할지, 지금처럼 문화전당과 연계해 운영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민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끝>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포함된 5월 유적인 옛 전남도청 본관이 80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된다. 사진은 지난 7월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의 복원 촉구 기자회견.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859명 정규직화

공무직 신분증 수여

광주시가 올해 용역업체 파견근로자 772명을 포함해 비정규직 859명을 정규직으로 재고용했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에서 운영한 광주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시 공무직 노조 및 전환 공무직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환 공무직(정규직)에 대한 신분증 수여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목표했던 분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청소미화, 주차, 안내, 경비 등 용역업체 파견노동자 772명을 포함해 총 859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완료했다.

시는 민선 6기 들어 비정규직의 고용·취우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총 120여 차례의 간담회와 TF회의, 실태

조사, 설명회,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해법 찾기에 나섰다.

기준인건비 제도와 공기업 경영평가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 공사·공단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시에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전환'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었지만 2016년 12월말 기준 변경을 이끌어내 기간제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무직 처우개선과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에 앞장서는 한편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자치구 인사 갈등 파행 치닫나

시 인사교류 중단 발표에 민형배 광산구청장 불만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와 인사교류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시의 인사교류 중단 발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 구청장은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고수하고 있어 부구청장 후보로 촉발한 인사교류 갈등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민 구청장은 27일 시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하고 "시가 주장하는 2015년 5월 인사교류 협약은 그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고, 시대 상황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인사와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위직을 불모로 한 시의 인사정책은 광주시답지 않다"고 지

적했다. 시는 민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인사 협약 당시 일부 자치구의 반대가 있어 결국 당시 자치구 송광운 협의회장이 중재안을 모았으며 광산구는 이 안에 따라 지난 1월 사무관 1명을 광주시로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시장과 구청장이 사인만 하지 않았지만 2011년 협약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주장이다.

시는 부구청장 자체 승진과 공로연수 대상 부구청장의 잔류를 고수하는 광산구와 동구를 제외하고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7년 도-시·군 정책간담회가 27일 담양리조트에서 열렸다.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우기중 전남 정부부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주철현 여수시장, 조충훈 순천시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박병중 고흥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일자리 창출 등 전남 주요 현안 상생·협력

도-시·군, 담양서 정책간담회

전남도와 22개 시·군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 등 전남 주요 현안에 대해 상생·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남도는 27일 담양리조트에서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22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도-시·군 정책간담회'를 열어 도정 및 시군정 주요 현안에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전남도는 2017 전남도청 주요 성과와 내년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시군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시·군은 우수시책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목포 해양케이블카 사업, 여수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 도약, 순천 도시재생 사업, 보성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900원 버스 시행,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 성공 개최, 영광 다양한 콘텐츠 활용형 청림교육 활성화, 완도 해양헬스케어산업(해양치유)육성 추진 등 34건이 소개됐다. 시군은 또 수산식품 수출

단위 조성사업 지원 등 13건을 건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도와 시군정은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며 "전남도청이 곧 시장·군정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도에서도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 시군에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시정공수협의회장인 박병중 고흥군수는 "도와 시군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인 도-시·군 정책간담회가 자주 개최돼 시군 현안이 도정에 많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 '청석 자율관리공동체' 어업관리 성공 모델로

특별사업비 공모 10억 받아

전남도는 고흥군 금산면 '청석 자율관리공동체'가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공모에 선정, 사업비 1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청석 자율관리공동체는 수산물 저온 저장고 건립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자율관리어업 효과, 공동체 참여의지, 발전 가능성 등을 검증해 어촌 공동체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에는 전국 61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신청해 3차례 심사를 거쳐 청석 공동체 등 최종 3곳이 뽑혔다.

청석 자율관리공동체는 미역과 다시마를 연간 1만2000t(19억원, 전국 약 5%)의 생산하는 해초마을로, 지난 2006년부터 50여명의 회원들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다.

청석 공동체는 특히 주 업종은 어선이 양식시설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했다. 갯

바위 뒤기, 해적생물 제거 활동 등을 자발적으로 했다. 어자원 확보를 위해 전복·농어 종자를 방류하는 등 마을이 공동으로 노력해 소득을 2배로 끌어올렸다.

청석 공동체는 사업비를 수산물 저온 저장고 건립에 사용할 계획이다. 저장고가 건립되면 2차 가공도 가능해 현재 매출(19억원)보다 3배이상 오른 6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원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결과는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어촌소득을 높이고 어촌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절실한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자율관리어업과 어촌이 활기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1월 전국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서 최우수공동체 1곳(신안 안장공동체)과 우수공동체 2곳(여수 안포공동체, 해남 송호공동체)이 선정돼 포상 사업비로 8억원을 확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 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분양 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유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